November 16, 2006

내일신문

"대북 포용정책 정경분리 필요"

[내일신문 2006-11-16 17:33]

[내일신문]

평화재단 토론회 … 경협·인도적 지원 계속돼야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운용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제조사문제연구소 조성렬 기획실장은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인한 대북저자세·퍼주기 논란 유발 △국제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국제적 지지 약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변화 거부 등을 참여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어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 해결 3원칙 중 첫 번째, 세 번째 전제가 깨졌다"며 "정치·경제·민간교류를 분리하고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중시해야 하며 합의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당근과 채찍 병행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협사업과 관련해선 "정부는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만큼 기업은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지를 명령할 요건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문제 삼는다면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합영사업 등 일체의 상거래 행위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남북경협의 키워드는 '활성화'가 아니라 '관리'가 돼야 하며 지금까지 이룬 것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핵실험 이후 경협에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면 순수 민간기업, 공기업, 지자체 등 다른 대안적 주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태연하게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동감한다"며 북핵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핵실험의 책임을 대북 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된다"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했고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토론자로 참가했다.

November 16, 2006
내일신문

Übersetzung

“Trennung von Politik und Wirtschaft hinsichtlich der Nordkoreapolitik ist notwendig“

Wirtschaftszusammenarbeit und humanitäre Unterstützung sollen fortgesetzt werden.

Im Rahmen der Peace Foundation-Diskussion, die am 15. November im Press Center stattfand, lobte der Projektleiter des Internationalen Forschungsinstituts, Cho Sung-ryol, die Fortschritte, die die Regierung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bisher erzielt hat. Dabei bezog er sich auf die Aktivierung de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sowie auf die militärische Entspannung. Er zeigte aber auch die Grenzen auf, an die diese Politik stoße. Di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müsse daher in Zukunft vermehrt an zivile Unternehmen übergeben werden.
Die Diskussionsrunde mit mehr als 300 Teilnehmern wurde von der Konrad-Adenauer-Stiftung mitinitiiert. Als Diskutanten waren der ehemalige GNP Parlamentarier Yoon Yeo-jun, der ehemalige URI Partei Parlamentarier Lee Boo-young, der Projektleiter der zivilen Zusammenarbeitsvereinigung Lee Seung-hwan sowie Cho Min, Forscher des Wiedervereinigungsinstituts, eingeladen.